

원전 지하연구시설 추진에...“핵폐기장 설치 수순” 논란

정부 비공개 설명회...지자체 대상 지하 500m 연구시설 부지 공모 언급 일부 전문가 “고준위 방폐장 우려”...원자력공단은 “안전성 확인 위한 것”

정부가 전국 원전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하 500m에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짓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URL이 고준위 방폐장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1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공단)은 최근 경주시 한 호텔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관련 원전 소재 지자체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 10명을 비롯해 영광군, 전남도, 부산, 울산, 경북도, 경주, 울

진 지역 지자체 공무원 17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URL 설립 계획과 사업 추진 방법 등이 공개됐다. 공단은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연구용 URL 부지 공모를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URL은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 조건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공단이 사업을 주관해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건설 예정이다.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사실상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다.

공단은 현재 1995년 대전에 만들어진 지하동굴 연구시설 ‘하나로’가 있지만 이는 수평 방향이고

URL은 우리나라 지질 연구 중 최초로 수직으로 500m를 뚫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강조한다.

URL은 15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11월 초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안이 통과 되면 내년 5월 목표로 URL 부지를 선정해 내년 연말내에 URL 건설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URL은 순수한 연구시설로 사용후 핵연료는 반입되지 않아 연구 처분 부지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처분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핵연료 물질 없이 모의핵연료를 사용해 ‘연구활동’만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하연구시설의 설치에 곧 고준위 방폐장 설치를 위한 사전 수순으로 본다.

이정은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연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설치하게 되

면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방폐물 영구처분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URL은 지진을 버티내는 단단한 기반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지하에 설치해야 하지만 연구시설 개소 이후 우리나라 좁은 국토에서 같은 조건의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하 500m에 연구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상암월드컵 경기장(21만6712㎡) 크기의 거대 암반이 지하에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5000억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과 까다로운 입지 조건을 거처 지은 연구시설은 곧 영구처분장의 개설 조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명은 요구한 또 다른 원자력 전문가도 연구용 URL이 설치되고 나면 영구처분장의 형태가 아니라더라도 임시저장 개념으로 처분장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포화 상태의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뚜렷한 해법

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혐오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URL이 임시방폐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결국 임시저장시설로 변환되면 이는 영구적인 방폐장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처분장을 짓기 전 연구시설을 짓고 방폐물 처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용 URL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방폐물 영구처분장 시설로 사용될 계획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위 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알려진 방사능 농도 4000Bq/g, 열발생량 2kW/㎡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원전 가동 후 남은 연료)은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원전은 2030년 저장기간이 가득찰 것으로 예상돼 조만간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1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초안 폐기를 주장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위한 방사선환경평가서 폐기하라”

중대사고·주민보호 대책 없어 광주·전남 환경단체들 촉구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영광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9월 12일 광주일보 6면)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단체)은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중대사고 시 주민보호 대책 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5년과 2026년에 사용 기한 만료를 앞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한빛1·2호기 수명연장(10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단체가 문제삼은 초안의 작성과 공개는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의 하나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자체 6곳(영광, 함평, 장성, 무안, 고창, 부안)에 초안을 제출했다. 지자체는 10일간 이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민 공람이 시작되고 수명연장 절차를 밟게 된다.

단체는 우선 초안에 원전의 중대사고가 상정·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상정한 뒤 주민피폭과 대피경로, 건강영향, 사망자 규모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중대사고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주민대피와 보호 대책 등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평가다.

또 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자체가 동일 부지에서 가장 최근 적용한 기술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규정 탓에 최신 기술이 나왔음에도 영광 한빛 원전은 30여년 전 지어질 당시 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됐다는 것이다.

단체는 “원전 사고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주민대피와 보호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한수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지자체는 초안 공람이 아닌 반력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지검, ‘사건 브로커’ 수사 확대

수사무마 대가 금품수수·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압수수색

수사기관 고위직들과 친분을 내세워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고 사기 용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 브로커’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A수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A수사관이 구속재판 중인 사건 브로커 B(62)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혐의를 포착, 증거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A수사관은 지난해 전남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고 2000여만원을 받아 동로와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어떠한 확인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A수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브로커 B씨 사건에 검찰수사관 이외에

도 고위 경찰과 지자체 등 공직자들이 연루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브로커 B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C(44)씨 등에게 13차례에 걸쳐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8억 5400만원 상당을 받아 쟁점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도 전남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한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등)로 구속됐다. C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여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6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자 경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친 스토킹 30대 구속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어겨진 여자 친구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남부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30)씨에게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94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30 여차례 남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

와 직장 등을 찾아가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광주남부경찰, 광주북부경찰, 광주동부경찰 3곳에 A씨의 스토킹 행위를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을 법원에 요청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남부경찰청은 A씨의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3개 경찰서의 사건을 병합해 A씨를 구속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통가능, 공과비를 2029년 1월 기준)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